
법무부 업무보고

2022. 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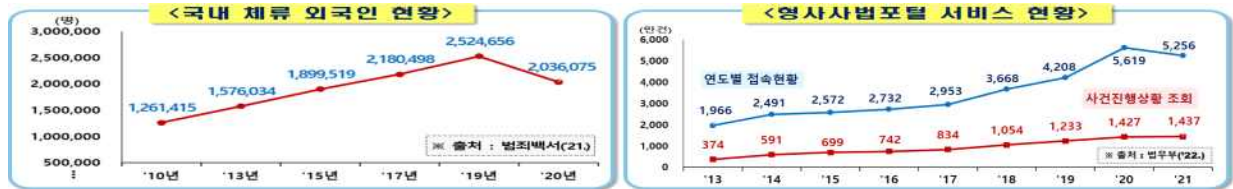
5대 핵심 추진 과제

- ①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4
- ② 인권을 보호하는 따듯한 법무행정 5
- ③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6
- ④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7
- 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8

1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 추진 배경

-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력에 맞는 국가대계 차원의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할 필요



□ 과제별 이행계획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

- ▲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 ▲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22. 6.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 전자 주주총회 도입 ▲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국 단위 조직 신설 추진)

* 【민법】 동물의 비물건화('21. 10. 법안 제출), 만 나이로 통일('22. 5. 법안 제출), 디지털콘텐츠계약,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규정 신설, 미성년자 빔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22. 하) / 【상법】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입법추진('22. 하)

-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 비자 정책*을 통한 국가 성장 지원 ▲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 통합관리('24.) ▲ 감시정 운용('22. 4.) 등 국경관리 강화, 불법체류자 관리 등 체류 질서 확립 ▲ 균형 있는 난민 정책

* 지역특화 비자,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시행('22. 10.) 등

- 첨단 IT 법률서비스 제공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종이 없는 형사재판, 「형사절차전자문서법」 '24. 10. 시행*)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으로 정보 접근권 강화('24. 12.) ▲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24. 1.) ▲ 법률서비스에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대(개인회생, 민사·행정소송 등)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 '10. 특허소송, '11. 민사소송, '13. 가사·행정소송 각각 전자화

2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추진 배경

- 범죄피해자와 사회적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헌법상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

□ 과제별 이행계획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 법률구조 통합 AI 플랫폼 구축('23.~'24.) ▲ 치유 전문 상담사 확대,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23.)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24.)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제도 마련('22. 6. 법안 제출)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 이주 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 ▲ 차단시설 제거, 주간 운동장 상시 개방 등 인권친화형 보호시설 확대('22. 4.부터 시범운영)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23. 상) ▲ 공항 외부의 출국대기 시설 마련('24.) ▲ 보호장비 사용절차 마련('22. 8.) 및 보호시설 출입국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22. 하)

○ 수용시설 인권 보호 철저

- ▲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하여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
▲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도입으로 수형 공정성 강화 ▲ 교정현장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수용자 처우 개선' 및 '수용질서 확립', '현장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완전한 4부제, 계호수당 인상 등)' 병행 추진('22. 하)

* '27.까지 교정시설 9개 신축·이전 및 노후시설 24개 리모델링·증축 추진,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 전담 시설로 전환

3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 추진 배경

-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부정부패 대응 역량 현저히 약화,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 신속히 회복하여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



□ 과제별 이행계획

- 부정부패 대응 역량 회복 및 강화
 - ▲ 부패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 '22. 하) ▲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 ▲ 불법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주요 청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22. 하)
* 대검찰청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증원('22. 하),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참관실 증설 및 포렌식 수사 인력 확대('23.)
-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 ▲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운영('22. 5.)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강화, 공정거래 수사조직 정비 등 공정거래 사범 엄단* ▲ 「조세 범죄 합수단」 신설하여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 적극 수사('22. 하)
* ① 검찰·공정위 간 자료 공유 및 인력 교류, ② 공정거래사범협의회 운영 ('22. 4.), ③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 확대('23.)
-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 대응
 - ▲ 펀드, 가상화폐 등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전세사기 엄정 대응*('22. 7.) ▲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22. 7.) 출범 ▲ 범정부 「불법 사금융 합동단속 상시조직」 적극 참여('23.) ▲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입법 지원(금융위 소관 디지털자산기본법)
*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계획적 범행인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 지시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추진 배경

-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는 형사법령, 공수처법 제·개정으로 국민 피해 증가 및 범죄대응 역량 약화



□ 과제별 이행계획

-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 수사지연, 부실수사, 부패대응 역량 저하 및 사경 고소장 접수 거부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
 - ▲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학계·변호사단체를 포함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운영('22. 6.~10.)
 - * ① 실무위원, ② 전문가·정책위원(고위급)으로 이원화하여 매주 회의 개최, 사경 수사지연 방지 규정, 영장사본 교부의무 관련 하위규정 신설 등 논의
- 검찰 직접수사 강화 등을 통한 범죄대응 공백 방지
 - ▲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22. 7.)*
 - ▲ 합수단 설치(보이스피싱, 금융·증권, 조세범죄) 등 기관간 협력 강화
 - ▲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22. 하)
 - ▲ 검사 피신조서를 대체하는 증거방법 마련('23.)
 - * 강력부, 외사부 등 폐지된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에서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수사 가능
-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개선
 - ▲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독립예산 편성('22. 하)
 - ▲ 법무부 내 TF를 출범*하여 국민피해 최소화 조치('22. 하), 현재 권한쟁의심판 철저 대응
 - ▲ 국민 알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공보규정 개정('22. 7.)
 - * (법령제도개선 TF)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 구체화 등 하위 법령 개정 추진 (헌법쟁점연구 TF) 현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22. 6. 27.)

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추진 배경

- 흉악범죄 증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빈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홍포화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 과제별 이행계획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 ▲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23. 시범실시)
 -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통합관리

* 지자체 CCTV와 전자감독시스템 연계 확대 추진(현재 10개 광역단체 ⇨ 전국), 철도경찰대와 핫라인 구축('22. 7.), 모바일 CCTV 조회('22. 8.), 현장 대응 시 주거지 출입 법적근거 마련('22. 하) 등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근절
 - ▲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22. 하)
 - ▲ 권력형 성범죄 양형 강화('22. 7.)
 - ▲ 검찰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 설치('23.)
 - ▲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22. 하, 법안 제출)

* ① 감호위탁 인프라 확충 등 가해자 분리제도 활성화, ② 초기부터 검·경·아동보호 관계자가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통합 대응, ③ 보호관찰소는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방문, 월 2회 이상 피해아동 확인, 출장면담을 통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등 사건발생부터 처리까지 전방위 대응
-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
 -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 ▲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 분류심사원 확충
 - ▲ 소년 보호처분 개선
 - ▲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22. 6.), 소년범죄예방팀 신설('22. 7.), 국민 여론·해외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소년법」, 「형법」 개정 추진('22.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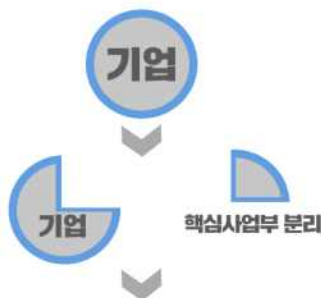
새 정부 **법무정책** 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 빛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빛**을
대물림받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법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주주·투자자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주가하락 및 주주피해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사, 신설된
자회사를 동시상장하는 사례로 인해 소액주주의
주주가치·투자자 신뢰 훼손 논란 발생



「상법」 개정 추진

- 관련 해외입법례 조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 방향성 도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로 신속·편리하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상 문서로 간주
 - 모바일 기반 현장 및 원격화상 조사: 모바일·PC로 시간·장소 구애 없이 조사
 - 형사사법 민원서비스 제고: 클릭 몇 번(전자적)으로 서류 제출, 기관방문 최소화
 - 형사절차의 전자화: 간편한 기록 열람·등사, 신속한 통지 등 형사사법정보 접근권 강화
 - 데이터 플랫폼: 방대한 형사사법정보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4. 10. 시행) 시행령 제정 추진 중

변호사 시험 CBT 프로그램 도입



수기(手記) 방식

수험생

장시간 수기(手記) 답안 작성에 따른 손목 등 육체적 피로, 답안 작성의 불편, 악필로 인한 불이익 등 호소

심사위원

악필에 대한 판독 곤란으로 인한 채점의 어려움, 장시간 소요 등 불편 호소



컴퓨터를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C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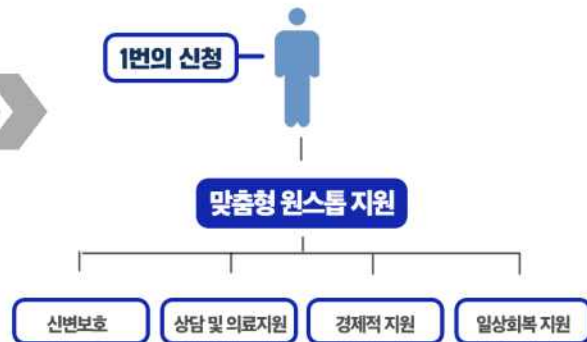
- 편익 증진
- 공정하고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시스템 제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자원

분산되어 있는 지원사업 비효율
지원 공백 등의 문제점 발생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V 아동유기
V 불법입양
V 의료와 교육기회 제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부모 또는 아동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학습권 보장



건강권 보장



범죄예방 정책 수립



교정시설 인권 향상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및 현장 직원들의 근무환경·처우 개선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조성

국민 모두의 이익

수용자 인권 보호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교정시설 신축,이전(9개)및
리모델링·증축(24개)추진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근무환경·처우 개선



수용자 인권 보호

수용자 처우 개선
수용질서 확립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시설 확충·현대화



수용자 인권 침해

수용질서 문란

열악한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 대법원 "교정시설 과밀수용, 정부 배상책임" 첫 판단('22. 7. 15.)

서민·청년 펀드 가상화폐 관련 사기, 전세 사기 엄단



- 대규모 서민 피해 범죄 철저 수사, 양형기준 강화
엄정 구형
- 악질적인 경제사범에 대한 선고형 대폭 상향
- 양형자료 수집 강화
-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자 보호 철저

아동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 피해아동-가해자 분리 제도 활성화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돌봄 위탁 확대
-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전자감독시스템



지자체 CCTV 연계



전자감독대상자



감독강화, 법제개선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제출

-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는 특정 범죄(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에 “스토킹범죄” 추가
-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필요적 부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 지자체 CCTV와 전자감독시스템 연계로 관리감독 효과성 제고
- 신속수사팀 설치 기관 확대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위험대상자 맞춤형 관리체계 확립
- 신속 대응 필요 시 주거지 출입 가능토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추진

소년 소년범죄 종합 대책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비행청소년 보호·교육

범죄소년 교정·교화 강화